

통합직제 개편...조직 일원화 따른 인력수요 반영돼야

아특별 통과 이후의 과제

<중> 시급한 문화전당 정상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아특별 개정안)은 그동안 이원화 체제였던 아시아문화전당(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문화원)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가기관으로 운영한다는 게 골자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그동안 솔하게 지적돼 왔던 이원화로 인한 행정 낭비, 비효율성, 양 기관의 소통 문제 등 문화전당 정상화 걸림돌이 됐던 요인들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화전당이 오는 9월 통합된 조직으로 새 출발하고 '문화발전소'로서 실질적인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통합조직의 직제 개정과 인력 총원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능과 역할에 따른 직제 마련, 적재적소 인력 배치는 문화전당 정상화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선결요건이다.

통합 문화전당 직제는 오는 6월께 대략적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 문화전당과 문화원은 내부 업무를 통해 두 기관 통합 이후의 청사진을 공유하며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 중이다.

이 가운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단(추진단)이 최근 공개한 후속조치 계획에 따르면 문화원 공무원직(153명)은 기능과 역할에 따라 소속을 변경해 오는 8-9월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들에 대한 전당으로의 소속 변경 배치는 현재로서는 큰 이견 없이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능·역할 맞는 적재적소 인력 배치 콘텐츠 등 유무형 자산 승계 필요 지역과의 상생·협력사업도 절실

문제는 문화원 소속 정규직 96명의 고용승계 부분이다. 아특별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원 소속 직원 중 전당 근무를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인원 내에서 공무원으로 채용한다'고 돼 있다. 다만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일정한 채용 절차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법안에는 전당에서 문화원 사업과 조직을 통합해 문화 관련 어린이 체원·교육시설 운영, 문화관광상품 개발·제작 등 사업을 수행하는 아시아문화전당재단(재단)을 설립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부칙에 따르면 '아시아문화원 소속 직원 중 재단 근무를 희망하는 자를 재단의 정원 내에서 고용을 승계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보면 '문화원 직원은 정원 내에서 재단으로 고용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는 공무원법에 따라 채용절차를 거쳐 전당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요약된다.

문화원 직원들은 2013년부터 문화원 전신인 아시아문화개발원에서 근무하다 2015년 문화원이 설립되자 적지 않은 인원이 일자리를 잃었던 트라우마를 지니고 있다. 고용 보장 등을 포함해 전당에 대해 불만을 느끼는 이유다. 이는 당초 문화전당이 국가기관으로 추진됐지만 이전 정부의 폄훼와 반대로 이원화 체제라는 다소 기형적인 출발을 한 게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병훈 의원은 아특별 개정안은 이 같은 이원화를 해소하고 지역 염원인 '전당의 국

가기관화'라는 원래 취지대로 간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이에 대해 문화계 인사는 "올해 실시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문화전당 일원화 시 최소 정규직 전문인력만 423~482명 정도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현재 문화전당은 322명 가운데 48명(일반공무원 32명·임기제 전문위원 16명)이 정규직이며 공무원(무기계약직)이 274명이다. 또 아시아문화원은 총 인원 249명 가운데 정규직이 96명, 공무원(무기계약직)이 153명이다"고 말했다. 이어 "2015년 아특별 개정안 당시 문체위에서 정규직에 대해 문화전당 100명, 아시아문화원 200명을 요구했지만 당시 행안부에서 그 절반으로 인원을 축소해 충분한 인원을 확보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점으로 미뤄, 당초 업무수행을 위한 총정원 증원을 전제로 한 일원화가 문화전당 정상화와 원활한 업무 수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문화원 기능 흡수에 따른 전당의 증원 수요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논리다.

한편으로 문화원 소속 직원들이 지난 5년간 진행해 온 유무형의 장·제작과 같은 문화자산 승계라는 관점에서 고용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문화전당 정상화는 국책사업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핵심 사업으로 콘텐츠 승계와 지역 협력 등 다양한 과제와 긴밀하게 연계돼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지역 문화계 인사는 "직무대행 체제는 통합 이전까지의 관리형에 불과하므로 문화전당 정상화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통합 이후 전당장의 조속한 선임 절차가 필요하다"며 "지금보다 위상과 권한이 강화된 전당장을 선임해 문화전당을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문화예술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투기사범 색출...43개 검찰청에 전담팀

투기비리 공직자 범죄최고형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비롯한 공직자들의 불법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색출해 엄벌에 처하기로 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결과 브리핑을 갖고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예방·적발·처벌·환수 대책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우선 "법정부 총력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현재 발생된 불법 행위를 철저히 찾아내 일벌백계할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철저히 색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규모를 2배 확대해 1500명 이상으로 하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 수사관을 투입하기로 했다. 부동산 투기사범 색출을 위해 수사 인력을 2000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김경 수사와는 별도로 국세청은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꾸려 부동산 탈세에 대응한다. 국세청이 부동산 탈세 혐의자에 대해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전국 대규모 개발 예정지역의 일일금액 이상 토지거래 관련자들에 대해선 전원 검증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공직사회의 부동산 부패 근절을 위해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 의무화 ▲부동산 업무 공직자의 직무 관련 신규 부동산 취득 제한 ▲부동산 거래 검사를 위한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 ▲국수분의 상시적 투기행위 적발 등에 나서기로 했다. /연합뉴스



아특별 개정안 통과로 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 통합이 오는 9월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아시아문화전당 전경.

문화전당 업무, 디지털 대전환 대비 융복합 특화 콘텐츠 개발에 역점

ACC 2021년 업무계획 간담회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리 최원일)은 올해 아시아문화원과 조직 일원화를 앞두고 조직, 인력을 재정비하는 등 체질 개선작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복합2관을 디지털뉴딜 기반의 미래형 융복합 콘텐츠 체험관으로 조성하고 아시아문화유산과 문화기술을 결합한 미래형 융복합 콘텐츠를 개발할 예정이다. '포스트 휴머니즘'을 주제로 차별화된 공연과 전시, 행사 등을 개최해 융복합 콘텐츠 창·제작

의 거점 공간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ACC가 29일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표한 2021년 계획에는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융복합 특화 콘텐츠 개발 등이 주요 업무로 포함돼 있다.

전당은 특히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결합한 관객 참여형 융복합 공연 '아시아의 몸짓: 비비린'의 완성도를 높여 관객에게 내놓는다. 공연은 일본에서도 동시에 관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창·제작 콘텐츠를 연차별로 정례화 하는 등 고유 브랜드 구축에 힘쓰는 복안이다. 5·18민주

화운동 기념 작품 '시간을 질하는 사람'을 정례 공연하고 실감 기술과 몰입형 미디어 기술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아시아예술 커뮤니티도 확대할 방침이다. 기존 중앙아시아 5개국을 7개국으로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국내외 유관기관, 단체 등과 손잡고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오월의 과거와 현재를 기록한 '어머니의 노래' 음반을 제작하고, 공연도 펼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

윤석열 34.4%·이재명 21.4%·이낙연 11.9%

리얼미터 차기 대권 지도도 조사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차기 대권 지지율이 30%대에 올라섰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2~26일 전국 18세 이상 2547명에게 여야 대권주자 14명의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4.4%가 윤 전 총장을 뽑았다. 한 달 전 같은 조사(15.5%)보다 18.9%포인트 뛰며 두배 이상으로 상승한 수치다.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리얼미터 조사에서 30%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2%포인트 내린 21.4%로 집계됐다. 3개월 만의 하락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11.9%로 3.6%포인트 내렸다.

윤 전 총장 부친의 연고지인 충청권에서 3배 가량 폭등한 것이 눈에 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대권 지지율이 4.5%로 1.3%포인트 올랐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4.5%로 2.1%포인트 내렸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6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개원 18주년!!

2021년 신축년 첨단우리병원은 철저한 **감염관리**와 세심한 **회복관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능!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한미쇼핑사거리)